

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손동필 연구위원, 현대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 요약

-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정부도 국민의 '안전권'을 중요 가치로 인식하여 복합적 위험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사고 및 불안감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 관련 사항이 복합적으로 조사된 '안전신문고'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별로 신고 유형 및 키워드를 분석함
- 신고 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 및 교통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았으며, 키워드 분석 결과 도로 파손, 보행로 파손 등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서울시는 가로등 및 가로수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며, 대전시 및 기초지자체는 전신주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한 신고가 많았음

● 시사점

- 일상생활 공간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 및 점검 정책 마련 필요
- 지역의 안전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안전 교육 시행 필요
- 위치 기반 자료가 포함된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물리적·비물리적 공간 개선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장소 중심의 공간안전디자인(Designing Safer Space: DSS)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① 서론

●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사회 불안에 따른 자살률 및 보행 중 사망자의 증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5명을 넘음
 - 최근 5년간(2014~2018)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 높음
- 반복적인 대형 재난안전 사고 발생
 - 2016년 9월 경주, 2017년 11월 포항 등 최근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1978년에서 1998년 사이 연평균 19.2회의 지진이 발생한 반면 1999년부터 2017년에는 연평균 67.6회의 지진 발생
 - 또한 대형 화재 사건(2017.12. 제천 스포츠센터, 2018.1. 밀양 세종병원), 해양 사고(2014.4. 세월호, 2017.12. 영흥도 낚싯배), 건축물 붕괴(2014.02. 마우나오션리조트, 2019.07. 잠원동 상가건물)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빈발함
- 정부도 국민의 ‘안전권’을 중요 가치로 인식하여 관련 정책 추진
 - 2017년 7월 국회의장실 의뢰조사에 따르면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1순위 기본권으로 ‘안전권’이 조사되었고, 헌법개정(안)에 ‘안전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안전권’ 부분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주요 신규 과제 중 ‘안전권’을 명시하였으며, 확대된 범위의 안전 관점에서 아래 과제들을 신설함
 -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및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등 신설

출처: 법무부. (2018). 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8월 7일 보도자료.

●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험 증대

-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 도시의 발달로 인한 인구 집중과 고밀 개발로 사고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상충되는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 제고
 - 중앙정부는 안전 관련 분야별로 안전 위협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설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일부 제도의 경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안전 개선 방안이 필요
 - 일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의하면 창문의 두께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화재 시 소방관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침입방어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함

● 복합적 안전 위협에 대비한 관계부처별 연계 및 통합

- 안전 관련 부처 간 연계의 필요성 증대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앙정부의 행정 및 안전 분야 민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1만 9,434건 중 단일 부처로는 현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의 민원 건수가 약 4만 7,000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경찰청을 포함하면 약 8만 건의 민원 건수가 집계됨

기관별 행정 및 안전 분야 민원 건수(2016~2019)

기관명	민원 건수	기관명	민원 건수	기관명	민원 건수
경찰청	32,402	고용노동부	17,271	교육부	8,336
국방부	27,327	국세청	13,420	해양수산부	7,707
인사혁신처	26,665	행정자치부	12,603	조달청	5,837
행정안전부	25,794	소방청	11,134	병무청	3,752
국토교통부	24,067	보건복지부	9,023	법무부	3,192
국민권익위원회	20,012	대검찰청	8,847	환경부	3,041
기획재정부	18,086	국민안전처	8,722	기타	3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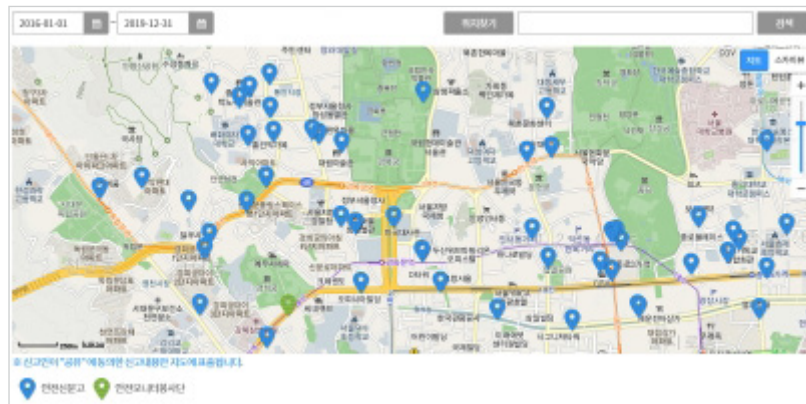
- 안전 관련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 국가는 대형 재난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재난 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생활안전을 위한 통합안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위협은 하나의 장소에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개선은 관계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생활안전 관련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함

1)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는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함

②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대상

-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등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안전 관련 사항을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임
 -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4년 11월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운영하고 있음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형 재난·재해부터 작은 안전위험 요소까지 망라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중 공유(공개)에 동의한 자료를 분석함



안전신고내용		f	🐦	📷
출처	안전신문고			
신고일	2017-04-12 11:58			
신고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전동 246-2			
신고내용	거리상치 조형물이 행인들의 보행에 다소 불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이 위험할 수도 있구요			



안전신고내용		f	🐦	📷
출처	안전신문고			
신고일	2018-04-24 10:08			
신고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3-1			
신고내용	<p>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길이 너무나 울퉁불퉁합니다. 특히 저차이나 비오는 날에는 아무도 걸을때에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밤에는 보행자 통로를 잘 알 수있도록 전구나 불빛나는 것으로 안내 및 보행자 통로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 길에는 공사로 인해서 큰 소음과 대형 공사차량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현황 지도 및 안전신고 내용

출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검색일: 2020.8.31.)

● 분석 방법

-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신고 현황 중 공개된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함
 - 도시 규모, 신고 유형, 신고 연도로 구분하여 지역별 주요 신고 내용에 대해 분석
 -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안전위험 요소 추출

안전신고 분야 및 주요 신고 유형

분야	주요 신고 유형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 확보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 파손,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차단봉, 가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시설안전	시설물 균열, 처짐, 뒤틀림, 파손, 흘러내림 등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 확보, 학교시설 안전 확보 등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기타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 검토 등

- 도시 규모별로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신고 내용 조사
 - 분석 대상 도시 선정은 우선적으로 지역별 분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도시 규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기초지자체로 선정하였음
 - 도시 분류 기준
 - ① 특별시 : 서울특별시 선정
 - ② 광역시 : 광역시 중 1곳 선정
 - ③ 기초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시 규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구수 10만~50만의 50개 도시 인구수 평균($\pm 10\%$)에 해당하는 도시와 인구수 10만 미만의 11개 기초지자체 인구수 평균($\pm 10\%$)에 해당하는 도시를 선정²⁾
 - 최종 대상지는 서울권(서울특별시), 충청도권(대전광역시), 경상도권(경주시), 전라도권(목포시), 강원도권(속초시) 총 5개 도시를 선정하였음

2) 인구 10만~50만 : 경주(25.3만), 거제(24.6만), 목포(22.5만), 양산(35.2만)을 1차 선정
인구 10만 미만 : 동해(9만), 김제(8.3만), 속초(8.2만), 남원(8만), 문경(7.1만)을 1차 선정

③ 안전신문고 분석 결과

● 연도별·신고 유형별 빈도 분석

• 서울시

- 서울시의 일상안전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전체의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14%) 및 ‘생활’(13%)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건수가 높은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차도 및 보행로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파손이 잦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후화된 지역의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신고 유형 및 연도별 일상안전 신고 건수

구분	교통	시설	생활	산업	학교	사회	기타	합계
2016	73	243	96	50	25	11	0	498
2017	70	533	144	66	9	6	5	833
2018	58	370	1	0	0	0	0	429
2019	50	11	0	0	0	0	0	61
합계	251	1,157	241	116	34	17	5	1,821

• 대전시

- 대전시의 일상안전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21%) 및 ‘교통’(13%)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대전시가 확장하면서 과거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전광역시 신고 유형 및 연도별 일상안전 신고 건수

구분	교통	시설	생활	산업	학교	사회	기타	합계
2016	3	9	5	20	-	3	-	40
2017	6	5	7	33	-	4	1	56
2018	2	10	0	1	-	0	-	13
2019	4	0	0	0	-	0	-	4
합계	15	24	12	54	-	7	1	113

• 기초지자체(경주시, 목포시, 속초시)

-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설’에 대한 일상안전 신고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경주시의 경우 신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측되어 정확한 안전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움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 사회, 기타 분야의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기초지자체 신고 유형 및 연도별 일상안전 신고 건수

구분		교통	시설	생활	산업	학교	사회	기타	합계
경주시	2016	-	-	1	-	-	-	-	1
	2017	3	2	5	1	-	-	-	11
	2018	-	3	-	-	-	-	-	3
	2019	-	-	-	-	-	-	-	-
	합계	3	5	6	1	-	-	-	15
목포시	2016	1	4	4	1	-	-	1	11
	2017	6	30	3	7	-	-	1	47
	2018	9	25	-	-	-	-	-	34
	2019	1	-	-	-	-	-	-	1
	합계	17	59	7	8	-	-	2	93
속초시	2016	1	3	-	-	-	-	-	4
	2017	3	1	2	1	-	-	-	7
	2018	1	5	-	-	-	-	-	6
	2019	-	-	-	-	-	-	-	-
	합계	5	9	2	1	-	-	-	17
총합계		25	73	15	10	-	-	2	125

● 키워드 분석

• 일상안전 키워드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

- 일상안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분류하면 우선 유형별로 ‘파손’ 및 ‘관리’로 대분류 하였으며, 파손에 해당하는 대상은 ‘도로’, ‘보행로’, ‘공원’, ‘공중케이블’, ‘교통신호등’이며, 관리에 해당하는 대상은 ‘가로시설’, ‘위생’, ‘가로수’, ‘적치물’, ‘불법 홍보물’, ‘소화전’ 등임
- 각 대상별로 상세 일상안전 신고 내용을 파악하여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각 키워드별로 얼마나 많은 신고가 발생하였는지 파악

• 서울시

- 서울시의 일상안전 신고 키워드 분석 결과 관리(57%) 유형이 파손(40%)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파손 유형에서는 ‘보도 파손’과 ‘도로 파손’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유형에서는 ‘보안등’(18.19%), ‘전신주’(7.36%), ‘쓰레기 무단투기’(6.9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서울시의 경우 주민들이 도로 및 보행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 일상안전 신고 키워드 분석

유형	대상	키워드	건수			비율
			강북	강남	합계	
파손	도로	도로 침하(포트홀)	43	15	58	3.19%
		도로 파손	111	91	202	11.10%
		맨홀	7	0	7	0.38%
		펜스	2	3	5	0.27%
		기타	21	9	30	1.65%
	보행로	보도 침하	29	29	58	3.19%
		보도 파손	113	89	202	11.10%
		볼라드	15	4	19	1.04%
		빗물받이	42	13	55	3.02%
		기타	19	18	37	2.03%
	공원	공원시설물 및 산책로	17	28	45	2.47%
		기타	6	2	8	0.44%
관리	가로시설	가로등(보안등)	93	238	331	18.19%
		신호등	18	16	34	1.87%
		펜스	8	4	12	0.66%
		전신주	64	70	134	7.36%
		가로수	89	37	126	6.92%
		표지판(안내판)	23	22	45	2.47%
		소화전	11	10	21	1.15%
		기타	20	16	36	1.98%
	도로 및 보행로	불법주차, 적치물	45	63	108	5.93%
	위생	쓰레기 무단투기	85	42	127	6.98%
		오염 및 분비물	8	0	8	0.44%
	하수구	막힘, 이물질, 파손	31	13	44	2.42%
		기타	3	1	4	0.22%
	기타		43	21	64	3.52%
	합계		966	854	1820	100.00%

• 대전시

- 대전시의 안전인식 신고 키워드 분석 결과 관리(68.1%) 유형이 파손(17.7%)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관리 유형에서의 가로시설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신고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전신주 관리 부실에 대한 안전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파손에 대한 신고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안전시설물 관련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 '도로의 침하'(3.54%) 및 '도로 파손'(3.54%), '보도 파손'(4.42%)에 대한 신고 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대전광역시 일상안전 신고 키워드 분석

유형	대상	키워드	건수	비율
파손	도로	도로 침하(포트홀)	4	3.54%
		도로 파손	4	3.54%
		맨홀	-	-
		펜스	-	-
		기타	1	0.88%
	보행로	보도 침하	2	1.77%
		보도 파손	5	4.42%
		볼라드	-	-
		빗물받이	-	-
		기타	1	0.88%
	공원	공원시설물 및 산책로	3	2.65%
		기타	-	-
관리	가로시설	가로등(보안등)	-	-
		신호등	-	-
		펜스	-	-
		전신주	67	59.29%
		가로수	1	0.88%
		표지판(안내판)	2	1.77%
		소화전	-	-
		기타	1	0.88%
	도로 및 보행로	불법주차, 적치물	3	2.65%
	위생	쓰레기 무단투기	3	2.65%
		오염 및 분비물	-	-
	하수구	막힘, 이물질, 파손	-	-
		기타	-	-
	기타		16	14.16%
	합계		113	100.00%

• 기초지자체(경주시, 목포시, 속초시)

- 기초지자체의 일상안전 신고 키워드 분석 결과 파손(65.3%) 유형이 관리(34.6%)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파손에 대한 대응이 대도시에 비해 늦는 것으로 나타남
- 파손 유형에서는 ‘도로 파손’이 10.48%, ‘보도 파손’이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유형에서는 ‘불법주차 및 적치물’(5.65%), ‘전신주’(4.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초지자체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에 비해 보행로와 관련된 일상안전 위협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초지자체 일상안전 신고 키워드 분석(경주시, 목포시, 속초시)

유형	대상	키워드	건수	비율
파손	도로	도로 침하(포트홀)	5	4.03%
		도로 파손	13	10.48%
		맨홀	9	7.26%
		펜스	1	0.81%
		기타	3	2.42%
	보행로	보도 침하	7	5.65%
		보도 파손	12	9.68%
		볼라드	8	6.45%
		빗물받이	9	7.26%
		기타	6	4.84%
	공원	공원시설물 및 산책로	7	5.65%
		기타	1	0.81%
관리	가로시설	보안등(가로등)	3	2.42%
		신호등	2	1.61%
		펜스	1	0.81%
		전신주	6	4.84%
		가로수	1	0.81%
		표지판(안내판)	6	4.84%
		소화전	1	0.81%
		기타	1	0.81%
	도로 및 보행로	불법주차, 적치물	7	5.65%
	위생	쓰레기 무단투기	4	3.23%
		오염 및 분비물	-	-
	하수구	막힘, 이물질, 파손	-	-
		기타	-	-
	기타		11	8.87%
	합계		124	100.00%

4 시사점

● 일상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점검 정책 개선

- 안전신문고 국민 안전인식 분석 결과 도로 및 보행로에서의 파손, 침하, 가로시설물의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시설물의 훼손이 국민들의 안전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안전 위협 요소를 개선하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도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해당 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집중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개별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안전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 개선 정책이 필요함
- 일상안전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이 대부분 공공시설물인 만큼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 맞춤형 안전 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시행

- 도시별 안전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별시는 도로 파손, 보행로 파손, 가로등 및 가로수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은 반면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는 도로 파손, 보행로 파손, 전신주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아 일상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함
 - 밀집도가 높은 특별시의 경우 도로 및 보행로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안전민감도가 높고, 특히 범죄 두려움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도심 공공시설물과 나대지 등의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함
-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다수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 상황에서의 사고 발생 유형, 대응 방안, 예방 방안에 대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이 필요함

● 다양한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안전디자인 기반 구축

- 지역 맞춤형 통합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장소 중심의 위치정보 기반 안전신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건축물 단위, 블록 단위, 행정구역 단위에서 안전 위협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맞춤형 공간안전 정책이 필요하며, 장소 중심의 물리적·비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전략 제시가 필요함
- 이때 시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안전디자인(Designing Safer Space: DSS)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간안전디자인은 공간의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의 여러 안전 관련 성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디자인임
 -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지건강 디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상충되는 부분과 보완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히 현장에서 해당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함

손동필 연구위원 (044-417-9685, dpson@auri.re.kr)

현태환 연구원 (044-417-9673, thhyeon@auri.re.kr)

박유나 연구원 (044-417-9833, ynpark@auri.re.kr)



건축공간연구원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발행인 박소현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 화 044-417-9600 팩 스 044-417-9607

www.auri.re.kr

